

특/별/대/담

북한의 인권과 우리의 대응

-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통 '담대한 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한 구상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대북 인권정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본격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임명되지 않고 있던 대한민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새롭게 임명함으로써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이라는 일반적 가치와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지 역시 높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실질적 담보인 북한 인권 개선이야말로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KDI 북한경제리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모시고, 북한의 인권 상황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특성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신화 대사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대담의 형식으로 재 정리하여 소개한다.

특 별 대 담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일(수) 오후 4시,
더플라자 비즈니스센터

사회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KDI)

대담자

이신화(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석 _

북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는 인권이다. 그런데 그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에는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압박함으로써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과,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명시적 입장 표명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북한 인권정책은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 대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을 모셨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신화 대사님께 감사드린다.

이신화 _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논란도 많고, 양극화되고, 정쟁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5개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고 있다. 아동권, 장애인권리, 여성권, 사회권, 자유권 이렇게 5개이다. 하지만 이는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취약층 위주로 성과를 내기 쉬운 부문에 대해서만 매우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올해 나온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Freedom House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권에서 40점 만점에 0점, 시민권에서 60점 만점에 3점을 받아서 총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 북한 밑에 4개 국가가 더 있는데 티베트,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결국 북한 정권은 세계 인권선언문에서 명기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권, 자유권이나 사회권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무척 열악하다고 판단된다.



북한 인권 : 정책과 대상 그리고 환경

이석 _

대사님의 말씀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신화 _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인권정책의 대상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주민, 둘째는 재외(특히 재중) 탈북자, 셋째는 국군포로(Post-War Abductees/Detainees: POW), 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들이다. 특히 전후 납북자나 억류자들은 한국과 일본 국적을 포함한 외국 시민들을 일컫는데, 이들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희생자인바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겠다. 북한경제는 국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28.4억달러, 2019년에 32.4억달러였는데, 2020년에 8.6억달러, 2021년에 7.1억달러로 급감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유니세프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고, 승인된 물품은 265만 9,000달러 규모이다. 이 물품을 영양 공급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언제,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대량 아사 사태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당시에 배급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은 대다수 아사했고, 생활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

북한 인권정책의 대상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주민, 둘째는 재외(특히 재중) 탈북자, 셋째는 국군포로(Post-War Abductees/Detainees: POW), 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들이다.

”

것이다. 또한 장마당도 존재하고 중국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사는 없을 것이다. 올해 9월의 추산에 따르면 작년 대비 가용 식량이 조금 늘었는데, 이는 제한적이거나 열린 장마당, 중국의 지원과 대러 무기판매 그리고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FAO가 지정한 44개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더욱이 11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잇따른 무력도발 후 내부 결속에 나서면서 방역을 빙미로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장마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식량 가용량이 다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기근은 결국 '식량 가용성(food availability)'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획득력(food entitlement)'의 문제라고 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 박사의 주장에 나도 동감한다. 즉, 식량이 있어도 식량에 접근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심각한 인권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루마니아 대사로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반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정권안보(regime security)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중 당연히 정권 안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는 주민들이 배불리 먹고 체제 비판이나 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갖는지 궁금하다. 대북제재는 김정은 체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층은 여전히 호위호식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 주민들, 즉 평양 밖에 있는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식량 획득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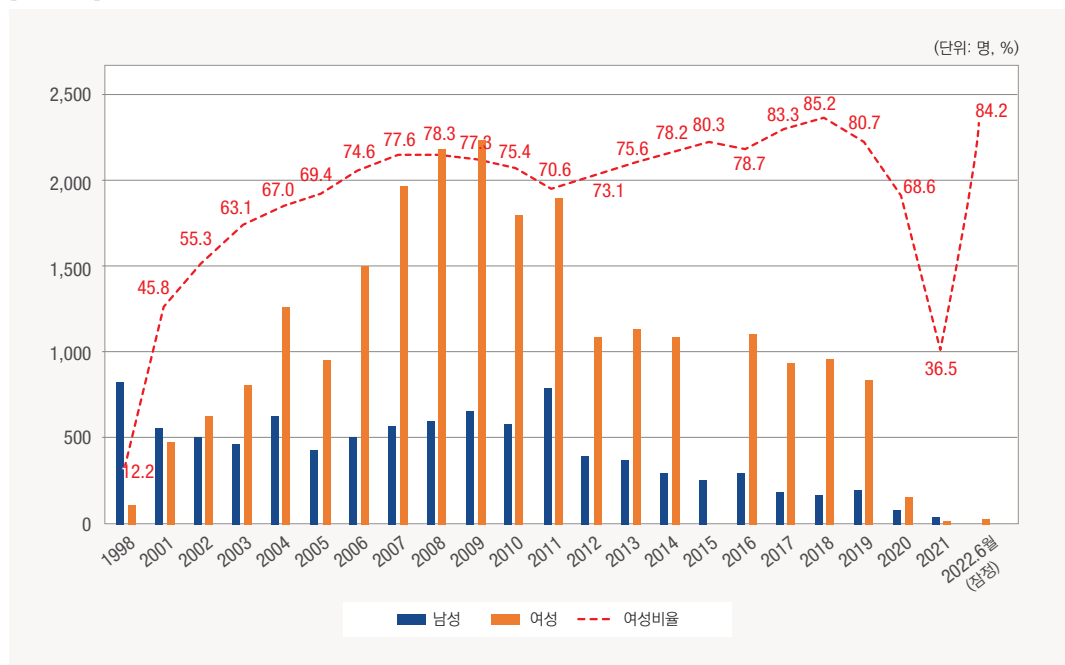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제재가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데 죄 없는 주민들을 압박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정권 안보와 권력 강화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과잉 통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두 번째 측면은 탈북자 인권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많이 들어왔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3천명이 들어왔는데 2012년부터는 줄어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정권을 잡고 그 이후에 통제를 강화하여 2012년부터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었다. 많이 줄었어도 연간 1,300명 정도까지는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국경 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숫자가 매우 줄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탈북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두만강을 비롯하여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휴전선(DMZ)화(化)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나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본인은 1997년에 쓴 논문 “In Limbo: Environmental Refugees in the Third World”에서 재중 탈북자들에 대해 “in limbo(불확실한 상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라는 표현을 썼다. 탈북자는 북한에 남아 있으면 굶어 죽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렵사리 중국으로 도망 나와도

[그림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주 : 입국현황(~2022년 6월 입국자기준)
자료 : 통일부

강제 송환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고충을 견뎌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인권유린, 인신매매가 되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고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서 무임금으로 일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송환된다. 처음에는 국내 유입 탈북자 중에 남자가 많았으나 2006년 정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8년 전체 탈북자 중 여성이 12%였는데, 2002년에 55%로 증가 하더니 2006년 75%, 2015년 80%, 2018년 85% 등을 기록하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졌다. 재중 탈북자들의 규모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출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연례보고서인데, 안타깝게도 탈북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 중국의 압력이 작용하여 탈북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북한 인권문제의 세 번째 이슈는 국군포로(POW), 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들이다. 최근에 참석한 몇 차례의 회의 및 심포지엄에서 NATO 의원연맹 대표단, 노르웨이 의원 등 외국 사절단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POW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POW에 대해서는 출처마다 통계가 다르다. 그래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통일부 통계를 연계해 보았다. 유엔은 1953~54년에 북한과 POW를 세 번 교환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POW를 교환하지 않고 거제도에서 석방해 버렸다. 이 수치를 포함하여 브리태니커 사전은 POW를 8만 2,000명 이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군사활동 중에 실종된 사람(missing in action: MIA)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에서 8,343명이 유엔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다. 1960년대까지 유엔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를 통해 계속 송환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외국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납북되었는데 한국정부는 70년이 훨씬 넘도록 무얼 했냐고 물었고, 나는 납북간에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송환 요청을 못했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나의 답변이 궁색하다고 자책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정부도 11번 정도 POW 송환이나 생사 여부 확인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가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상호교환 원칙을 저버리고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북한 POW의 실정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최초로 POW였던 조창호 대위가 탈북자로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이후 총 80명가량의 POW가 (대부분 자력으로) 입국하였고, 그들을 통해 POW가 북한에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OW들은 최하위 계급 43호(북한은 인민들에게 서열을 계급처럼 번호로 매김)로 불리면서 아오지 탄광 등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그 자식들도 '43번의 자식들'로 불리며 사회 계급이 불량 성분으로 분류되어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2006년 당시 북한에 POW가 545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누적된 탈북자 3만명 중 POW가 8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북한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90~100세가 넘었을 테니 생존자가 훨씬 적을 것이다. 그 외에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납북해 간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516명이다. POW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생활고를 고려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 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선교사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탈북자 출신인 김원옥 외 2명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빼오려다가 북한에 붙잡혀 현재 6명이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석 _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의 주요 대상자들로서 북한주민, 탈북자,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들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이신화 _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EU의 주도하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대사를 맡은 이후 두 달 반 동안 저한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은 대사나 학자를 포함한 유럽 사람들이다. 최근 들어 유럽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덜한 것은 첫째, 다른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피로도(fatigue) 문제이다. 20여 년 넘게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쌓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NATO 의원 중 한 명이 말하길, 여태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 핵협상, 압박, 제재, 인권결의안, 안보리 논의 등 안 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시급성과 피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석 _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약화와 피로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무척 안타깝다. 이의 원인과 처방 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신화 _

북한 인권문제가 갖는 첫 번째 과제는 인권문제가 전통적 군사문제에 늘 우선순위를 빼앗기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시급성과도 연관된다. 미국의 Andrew Yeo와 Roberta Cohen 박사가 주장한 대로, 북한 인권문제는 상황이나 정권 성향에 따라 켜다 켜다 하는 스위치가 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가 대두되거나 미국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으면 인권은 관심 밖이 되어 버리곤 했다.

“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과
인권유린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패키지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과 인권유린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패키지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사회가 6자회담 때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 토론하며 마침내 만들어 낸 비핵화의 정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다. 그런데 보란 듯이 지난 9월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핵 국가이고 이를 제도화했다고 선언했으며, 이 선언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고 했다.

이는 CVID를 위해 노력한 국제사회에 대한

조롱인 듯하다. 비핵화 대신 미국과의 양자 군축회담을 추구하며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인권문제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tackle with) 있어 핵심 어젠다이다.

두 번째 과제는 책임 규명과 인도적 지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가 정쟁화 되는 이유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북한과의 관계나 북한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만 이야기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책임 규명, 인권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원래 진보의 가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하면 보수, 국내 인권하면 진보로 나뉘어 있다. 미국 활동가 Suzanne Scholte가 제게 이야기하길, 미국도 굉장히 분열된 사회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축복(blessing)’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노르웨이 의원연맹 대표도 나에게 왜 인권문제에 대해 여야의 생각이 다르냐고



물었다. 한국의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정권은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 갈등 수준의 이견을 보여 왔다.

세 번째 과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Human Rights)과 관련된 문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채택되었는데, 그 당시 있었던 59개 회원국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유엔 헌장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선언이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도 채택되기까지 1,400번 정도 투표를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이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치화되었다. 즉,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큰 도전 과제인데 그 과정에서 유엔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 중, 러 간 강대국 갈등이 첨예하게 심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 정치(veto politics)가 횡행하게 되어 ‘식물안보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네 번째 과제는 중국과의 공조문제이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공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공조하여 유엔에서 대북 인권과 관련해 협조를 안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에 있어 취약성(vulnerability)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북한이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9점을 받았다. 중국은 신장문제에 대해 ‘서방에 의해 날조되었다’, ‘정치화된 것이다’, ‘이중 잣대이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미중갈등이 첨예해질수록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세계와 대립하면서 북한이 이득을 보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 내 탈북자

때문이다. 외부에서 중국 내 탈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할수록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는데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없다. 1951년, 1967년의 유엔 난민법 등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중국이 유엔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중국이 대만의 핵무장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했는데 이제는 서방이 먼저 북한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한다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2022년 10월의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러시아 차석 대사가 말하길 북한은 0% 문맹률과 0% 실업률인 나라라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북한을 감쌌다. 여기서 0% 실업률은 강제수용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합친 수치로 보인다. 그동안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권문제는 서구가 조작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비판했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 통계를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걸 보니 우려가 크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윙보터(swing voter)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10월의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EU 대표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고, 12개 국가가 반대, 1개 국가(적도 기니)가 모호한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EU의 회원 국가는 27개 국가니까 찬성 11개국을 합치면 37개국인 찬성한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므로 결과적으로는 11개 국가가 찬성 발언을 한 것이고, 13개 국가가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택한 것을 보면 유엔에서 점점 스윙보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합의가 아닌 표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참고로 공개적으로 반대한 국가는 발표 순서대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베트남, 벨라루스, 러시아, 라오스, 시리아,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였다.

한국의 접근방법과 윤석열 정부의 강조점

이석 _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신화 _

비핵화에 대한 정의, CVID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인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에 대한 정의와 상황, 이슈를 만드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든지 간에 인권의 정의에 대해 바뀌지 않는,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인권이 북한에 굉장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책임 규명이다. 책임을 모니터하고 추적해서 기록하고 문서로 보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발의(2005년)되어 통과(2016년)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미국에서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 제정하였는데, 여야가 법 제정을 합의하면서 통일부가 기록을 하고 기록의 법적 효력을 위해 법무부가 문서로 보관하는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난 진보정권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법무부 바로 밑에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서 분리하여 오산으로 이전시켰다. 저는 그걸 다시 법무부 본청이 있는 과천으로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에 있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독일은 나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없다.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참고로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행될 때 북한이 그 보고서에

“
인권이 북한에
굉장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도화하는 것만으
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최고지도자’ 이야기를 넣지 말라고 로비를 했다. 그런데 결국 ‘최고지도자’를 넣는 분위기가 되니까 ‘김정은’이라는 말은 넣지 말라고 로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고지도자’는 들어가고 ‘김정은’은 빠졌다.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듬해인 2015년에는 리수용 외상이 유엔 총회에 15년 만에 나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발하였다. 그만큼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이다.

2014~17년간 이어졌던 유엔안보리에서의 공식 북한 인권문제 논의는 2017년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변되는 ‘비핵화 정치쇼’를 계기로 끊겼다.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공개 논의는 재개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공개 논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총 15개국 중 2/3, 즉 9개국이 찬성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보리 내 공론화의 진행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도 9개의 찬성표만 받으면 된다. 오는 12월에는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일본이 의장국으로 들어오는 내년 1월이 기회이다. 5개 상임이사국 중 찬성표를 던질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이므로 3표가 확보된다. 1월에 바뀌는 새로운 비상임국가를 포함한 비상임이사국들은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UAE, 일본, 에콰도르, 몰타, 모잠비크, 스위스이다. 이 중에서 확실하게 찬성할 국가는 일본, EU 국가인 몰타, 스위스이다. 그렇다면 추가로 3표가 필요한데 UAE에 한국 원전을 수출했으니 UAE, 그리고 브라질이 찬성한다고 해도 아직 한 표가 부족하다. 가봉, 가나, 에콰도르, 모잠비크는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 같으므로 알바니아를 설득해야 한다.

세 번째는 건설적인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이다. 북한 인권이 당면한 과제로 책임 규명과



인도적 지원을 꼽았는데, 건설적인 관여에서 말하는 인도적 지원이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식량권 확보 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의 국제사회의 투명하고 직접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이는 과거 진보정권이 북한정권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인권을 인도적 지원의 측면에서만 강조한 것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북한에서 내보냈던 국제구호기구 직원들과 외교관들에게 국경을 열어야 한다.

진보정권이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이산가족 상봉 역시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관계가 괜찮아졌을 때 북한이 선심 쓰듯 주는 선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인권법상 가족 분리는 위법 행위이므로,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촉구를 외면하는 북한정부의 행태 역시 책임 규명의 대상이다. 이산가족은 남측 가족에게도 분리된 거지만 북측 가족들 입장에서 분리된 것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남은 분들에게도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역량 내에서 내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서 가장 추진하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정책을 직접 만들 순 없지만 되도록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회의, 모임 등 무형, 유형의 네트워크(플랫폼)를 많이 제공하고 싶다.

앞서 말한대로 유엔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EU와 미국정부와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며 대북문제 관련 유사 입장국가(like-minded countries)들 간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생각이 다른 국가들(nonlike-minded countries)을 설득하고 관여(engage)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렇듯 북한 인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은 북한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민·관·학 협력이다. 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국제 안보를 연구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많은 국제회의나 정책회의 등을 해온 사람으로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특히 더 절실하게 느낀다. 이를 위해 학자 모임, NGO 모임, 그다음에 대사들과의 모임에 계속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지 이야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의 인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있어 정치외교나 안보전문가들만이

“
북한 인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은 북한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

아니라 경제학자들, 국제법학자들과의 학제 간 연구도 중요하다. 학자들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제기구 역시 북한문제 해결에 빠질 수 없는 당사자들이다. 또한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 인권 NGO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나 지식 그리고 헌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외국 대사들이나 외교관들과 NGO와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영어를 쓰지 않는(non-English speaking) NGOs들이 가진 풍부한 로컬 지식과 경험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나의 주장에 공감하였다. 나는 이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젊은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이 세상은 그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나갈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

“
북한 인권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젊은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젊은이들은 정의감이 투철하여 인권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한다. 유엔 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ssion) 사무부처장과 그 산하에 있는 선임직원과의 모임에서 ‘유엔 군축위원회도 이제는 군비 축소만 독립적으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 핵실험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핵개발에 동원된 과학자들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증언을 받는등 그 지역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나는 그런 접근을 “humanitarian approach to disarmament”나 “humanitarian phases of disarmament”라고 명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매년 열리는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 이미 포함시킨 청년 ‘Outreach to the Youth’ 세션에 더해 인권문제를 다루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논의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남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립적 본부(Headquarters)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국의 납북자 이야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크다. 일본 외무부의 초청으로 12월 10일에 도쿄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선언기념식’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북한 인권의 광범위한 측면에서 일본 납북자 이야기를 해야 국제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피로가 누적되면서 무관심해지거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 국제기구 대표는 “fall off”라고 표현하였고, 한 NGO 대표는 ‘North Korean ghetto(북한의 게토현상)’라고 했다.

북한이나 팔레스타인 등 오래된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관심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재활성화시키려면 보편적 측면, 즉 세계적, 지역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석 _

말씀 감사하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별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신화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진보, 보수의 입장 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정부와의 대표적인 차별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피로가 누적되면서
무관심해지거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재활성화시키려면 보편적 측면,
즉 세계적, 지역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이신화 _

당선자 시절 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집권하는 대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나의 임명이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을 ‘이롭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윤 대통령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들어선다면 그 단계에 부합하여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비핵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맞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담대한 구상을 ‘허망한 꿈’이라고 비난하였다. 국내 일부 보수층 사이에서도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혹자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더 담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핵 대응능력을 증강하여 북한이 군비경쟁에 매진하도록 부추겨 북한의 경제가 더 피해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나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국제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기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주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이들의 인권이 악화되는 부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국내의 경제도 그렇고 국제 정치 안보 상황도 그렇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만 외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역할만 하면 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 가야 할 책임도 있다 보니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담(baggage)이다. 하지만 EU가 매년 꾸준히 발의해 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권에 따라 공동발의국에 들어갔다 빠졌다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는 진보정권, 보수정권에 따라 다르게 이름 지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선도중추국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인권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 이를 정쟁화 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신장 위구르 결의안 상정에 동의했다. 그런데 11월 2일 공동 발의에는 빠졌다. 50개 국가가 찬성을 했는데 인권 선도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우리나라가 빠진 것이다. 미국이 섭섭함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신장 인권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해명 입장을 내자,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에서 하는 국제회의에 초대된 중국 민간 학자가 이 해명 입장을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다.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변수가 생각보다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판’을 키우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협력을 할 때는 AP4(Asia Pacific 4) 형식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진행하여 판을 키우는 것이 좋다. 한 마디로

“

우리 정부의 구상이 국제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기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주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이들의 인권이 악화되는
부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이슈를 키우는 것이다. 이슈를 키우는 것은 군비 축소와 인권을 합한 회의에 우리가 주도국으로 참여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고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너무나 복잡한 관계, 우리 국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리고 북한과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것이고, 여러 딜레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책적, 전략적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석 _

말씀을 들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강조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분열된 상황이며 중국문제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입장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신화 _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권의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인권문제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체크리스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겐 자유가 있다든지, 말할 권리가 있다든지, 이동의 자유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가장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최고지도자가 되더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정하고 싶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우리는 북한에 너무 양보를 많이 해버렸다. 인권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도 한 번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안 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유럽이 결의안 내는 것만 멈추면 정치적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협상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원칙을 지킬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뭘 더 해도 북한의 입장에서 협상의 자리로 나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담대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게 너무나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합의(consensus)를 정립하고 싶다. 모두가 인권 가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한 태도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와 정치 상황에 따라 입맞대로 달라지고 있다. 2017년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이야기를 중점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8년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다음부터는 ‘human rights’의 ‘h’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신장-위구르 이슈에서 이번에는 해당 이슈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중국에게 양자적으로 우려 사항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양자 관계보다는 다자 관계로 판을 키워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우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제 관계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인정한다. 요즘 국제사태를 지켜보면, 강대국들이 여타 국가들을 짝 줄 세워 놓고 몽둥이를 딱 들고 “그래, 너는 yes야, no야?”라고 하는 상황



같다. 비강대국들은 눈치봐서 “yes”했다가 한 대 얻어맞고 “no”라고 바꾸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 건 아닌가 싶다. 누군가 옆에서 변함없이 지지해 줄 강대국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블링컨 美국무장관은 장관청문회에서 미국 측에 서는 국가들(그래서 중국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국가들)과 집단적으로 안보공조, 경제협력을 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줄여 가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자국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IRA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나? 미국도 우리 옆에 서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강대국의 패권은 강력한 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의 제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도덕적 파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석 _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백서와 같은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정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신화 _

우리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이 모여서 토론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렸었다. 아직 한 번밖에 안 열렸지만 거기서 북한인권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회의에서 북한인권백서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인권단체(NGO)에서 만들어 왔고 또한 서울유엔인권사무소(OHCHR Seoul)에서도 만들고 있으니, 이러한 노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분기별 리뷰, 연 리뷰와 같은 것을 발간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내서 동의를 받았는데, 연내에 발간될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아직 듣지 못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북한 인권 관련 국내 NGO들이나 학자들은 많은 경우 책임 규명에만 집중하거나 인도적 지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잘 포괄하여 북한

“
NGO, 국제기구, 정부의 각기
다른 역할들 그리고 그들 간
협력해서 할 일들에 대한 상호
이해와 상호 인정을 통해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상호
협의를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

”

“

북한 인권 관련 유·무형의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한 교집합을
확대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NGO, 국제 기구, 정부의 각기 다른 역할들 그리고 그들 간 협력해서 할 일들에 대한 상호 이해와 상호 인정을 통해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상호 협의를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 북한 인권 관련 유·무형의 플랫폼(네트워크)을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한 교집합을 확대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석 _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플랫폼도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인가?

이신화 _

그렇다. 국내 단체들이 언어의 제약으로 국제 교류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데, 언어적인 장벽만 해결하면 훨씬 좋은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한국 주재 여러 대사들도 이러한 상황에 공감을 하고 있고, 나도 국내 NGO들과 외국대사 및 외교관들을 연결해 주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POW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에 POW 코너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처음에 POW 가족들이 국방부 앞에다가 동상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가족들을 만나서 일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국방부보다는 전쟁기념관에 코너를 만들어서 전쟁포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가족들도 공감을 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에게 건의하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현재의 상황

이석 _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북한 인권에 변화를 주려면 북한 당국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밖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 정부들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각 또는 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신화 _

그런 식의 담론을 해야 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북한 친화적인 자세로 나갔는데 진전된 것이 없다. 제가 요새 떠올린 단어 중에 하나가 ‘내재화된 관대함(embedded generosity)’이다. 진보정권이 관대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서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에 서신으로 조사해 달라 그랬더니 북한 측에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2018년 9월에는 평양에 가서 마치 내일 통일될 것처럼 약속하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한 서신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둘이만 만나자고 하지 않았나? 친절하고 포용력을 가진다고 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건설적인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화 제의는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니까 원칙적 접근(principled approach)과 실용적 접근(practical approach)을 둘 다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권의 가장 아쉬운 것은 원칙적 접근을 버린 것이다. 인권을 너무 언급하지 않고 실용적 접근만 견지한 것이다. 북한 정권에 우리는 적화통일 대상이다. 북한은 그 태도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북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권안보이기 때문에 진정한 비핵화를 의도한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40~50년 통치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계획 속에서 핵 없는 북한은 ‘양꼬’가 없는 것이다. 김일성 전 주석이 1950년대부터 핵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따라서 핵은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의 유훈인데, 그 유일 지도자의 유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주민을 생각하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루마니아 대사의 질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정책 법제화, 그다음에 코로나19, 민생, 외교정책의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백신 접종, 11월부터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국가방역능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협력 다각화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으로 식량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와 농진청은 80만톤 부족, CIA는 86만톤 부족, 미국 농무부는 120만톤 정도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7월에 중국한테 약 515만달러를 지불해 한 1만톤 정도 정미를 수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쌀 지원이 지속되고,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된다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려우나 버티기는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물론 최근 정보에 따르면 다시 일반 북한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21년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보면 2018년에 삭제됐던 용어인 “egregious”가 다시 등장하는데, 아주 지독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그 단어가 보고서에 다시 등장했고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등장한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권력 공고화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국경 지대 월경 시도 중 사살을 명령했던 사례,

의약품 부족으로 확진자가 굶어 죽거나 동사하고 있는 것, 국제기구 직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 내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등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동문화사상배격법도 북한 내에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일반 주민의 ‘알 권리’가 ‘식량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의거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히면 공개처형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공개처형도 이전보다 더 잔인한 수법으로 자행되는 등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등을 보다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 역시 인권유린이니, 차라리 중국 드라마와 같은 것을 유입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도 한다. 북한은 전단, 삐라를 제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얀마 사태도 국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커졌다. 미얀마에서 끊임없이 민중을 계도하고 왜 R2P(보호책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게 북한 정권한테는 제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의 고위관료들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2,500만명의 전체 북한주민들은 250만명의 평양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 250만명의 평양 주민들은 TV에서 볼 수 있는 당대회에 나와서 박수 치는 엘리트 250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정보 공유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석 _

오늘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을 모시고 북한 인권 및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그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이신화 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